소 장

원 고 여 지 우 서울시 관악구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서초동, 희성빌딩) 담당변호사 임 재 성

피 고 관세청장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 1. 피고가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여지우는 평화운동단체인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입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설립되었는데, 당시부터 20년이 넘는 현재까지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담 및 지원,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③ 비폭력 트레이닝 개발및 워크숍 진행, ④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등의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원고는 위 전쟁없는세상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기감시 캠페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전쟁없는세상 비영리단체등록증, 갑 제2호증 전쟁없는세상 정관, 갑 제3호증 여지우 재직증명서).

피고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장입니다.

Ⅱ. 이 사건 처분 경과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단체 소속 활동가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u>국방영역에 대한 투명성</u> <u>확보</u>를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 니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 1.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 실적
- 2.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입 실적

2. 피고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 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 처분

피고는 2024. 3. 6.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피고 2024. 3. 6.자 정보비공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9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들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방 등 국익침해"를 처분의 근거로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 3.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 3. 26.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를 들어 기각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피고 2024. 3. 26.자 이의신청기각 처분).

3.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하에서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준의 유사한 정보들이 이미 국내 및 다른 국가에서도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중대한 국익이 훼손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확보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무기류 수출입 관련 정책과 집행의 투명성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공익입니다.

이하에서는 ①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 이전에 이 사건 정보를 실질적으로 특정하고, ② 국방영역에서 과도한 비밀주의 문제점과 국방정보의 투명성으로 확보되는 공익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면서, ③ 이 사건 정보를 '국방'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u>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입 정보는 피고 및 여러 공적 기관들에 의해 이미 공개</u>되고 있다는 점, ⑤ 외국(영국)에서도 각국 무기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각 확인하고자 합니다.

Ⅲ. 서언1.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실질적 특정 (HS 코드 93)

이 사건 정보는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입니다. 대한민국이 2023년 1년간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무기류를 수입하였는지,

반대로 어떤 나라에게 어떤 무기류를 수출하였는지에 대한 실적통계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 처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이 사건 정보가 위 기재 자체로 특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 있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여러 논박과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다 실질적으로 특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무기류'라는 단어에 일정한 추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 사건 정보가 구체적·실질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가 '무기류'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해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무기류'를 'HS 코드 93'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하고자 합니다. 'HS 코드'(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 (WCO)가 관리하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코드이기에, 피고 역시 수출입 무역통계를 관리하면서 'HS 코드'를 핵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S 코드 중 '코드 93'은 "무기·총포 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무기류'를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으로 묶어놓은 항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HS 코드 93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세부 목록]

HS 코드	HS 코드 설명
9300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 •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 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 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7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인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u>무기류</u> 수출입 실적'을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u>HS 코드 93</u> 수출입 실적'이라고 실질 적으로 특정하고자 합니다. 'HS 코드 93'는 '무기류'를 지칭하는 가장 일 반적인 항목이기에, 피고 역시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Ⅳ. 서언2. 국방영역에서 투명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원고는 본 항에서, '국방'영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비밀주의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으로 인해 '국방'영역에서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

요한 공익인지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 중 '국방'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유명무실하게할 정도가 되면 군사분야의 문제는 과도한 비밀의 베일에 둘러싸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와 같은 부당한 보호막 속에서 국방(군) 영역의 불법·비리·책임회피적인 사태가야기되어 왔음을 경험했고,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서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무기류의 수출입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위 '방산비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때문에 2006년 '방위사업청'이 별도기관으로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방위사업법」제2조에서 "방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며 '투명성'을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목표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군사기밀에 대한 적정한 보호는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u>군사</u>기밀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함께 반드시 병존하여야 할 가치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투명성 확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알권리가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국방관련 정책 결정과 관련 절차가 모두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외부의 견제 없이

독주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랜 시간 경험한 바와 같이 무기 수출 입 과정에서의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대학교가 발간한 「방위력 개선분야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연구」(2006)에서는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유익할 수 있음", "필요 이상의 군사기밀 보호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봉쇄하게 되어 국민의 불신·비협조·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국민의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무감각, 소외감, 적대감을 갖게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이라면 오히려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하여 실질적인 총력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갑 제6호증 국방대학교정책보고서 66면)과 같이 국방관련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익들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이 2023년 1년 동안수출·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HS 93코드에 따를 때 8개 항목) 총액을 담은 수준의 정보입니다. 이 정도 대분류 수준의 총액 정보가 과연 대한민국 정도 수준 국가의 국방이라는 국익에 어떠한 실질적인 해악을 야기할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이미 국내외에서 쉽게 확인되고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공개될 경우 국방에 현저한 위협이 된다며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국방 영역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에 근거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정보 수준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방위산업과 무기수출입이라는 외교·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나 검증, 비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V. 이 사건 정보는 '국방'과 관련된 정보가 아님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 비공개 사유로서의 '국방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 소정 비공개 사유로서의 '국방'은 앞선 IV.항에서 살핀 '국방영역에서 투명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정보가 국방과 관련 있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되어야 할국방 또는 군사기밀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운용에 있어서국방을 무조건적인 예외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보가 '국방'과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 여부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국방 영역과 포괄적·추상적 관련성을 가진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에 ①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또는② 국토 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 실적'은

국방과 관련된 정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u>외국에 수출한</u> 무기류 실적에는 대한민국의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또는 '국토 방 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입 실적' 역시 그 정보의 구체성에 비춰봤을 때, 이를 비공개 사유 중 하나인 '국방' 정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정보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HS 93코드 8개 항목) 총액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 정도추상도를 가진 정보에 국토 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무기배치나 전력운용 내용 등이 담겨있지도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서 어느 항목 무기를 어느 정도 수입했는가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 토론과 검증, 비판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정보이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방영역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는 유력한 방식입니다. 정보가 없다면 분석도, 토론도, 검증도, 비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핵심적 가치인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수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방 정보라고 볼 여지 자체가 없고, 수입 부분도 추상성이 높아 비공개 사유로서의 국방 정보라 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VI.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가 국내에서 이미 공개되었음

1. 서언

원고는 본 항과 다음 WI.항에서, 가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 비공개 사유로서의 '국방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원고는 위 주장의 방식(전략)으로 이 사건 정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국내외에서 일상적으로 적극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공개되고, 보도되고 있으며, 분석, 검증의 대상이 되는 수준의 정보를 '중대한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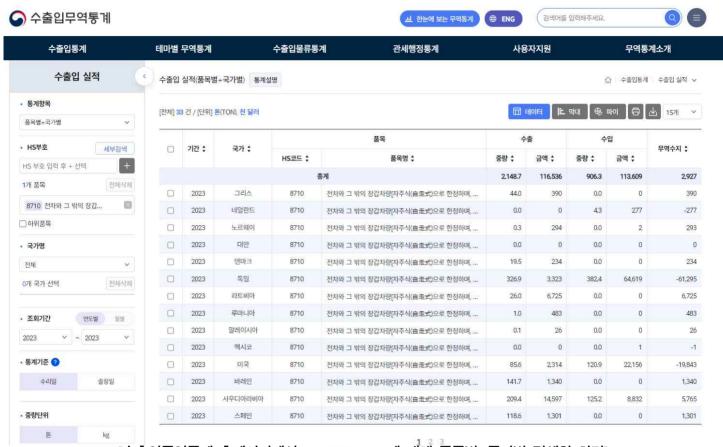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HS 코드 8710'를 공개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HS 코드 8710'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 량[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S 코드 8710 항목의 정보인 '장갑차량'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준의 '무기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항목 표제만으로도 명백한데, 피고가 운용 하는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1)에서는 'HS 코드 8710'(전차와 그 밖의

¹⁾ https://tradedata.go.kr/cts/index.do

장갑차량)에 대하여 2023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이 아래와 같이 단 한 번의 검색만으로 손쉽게 확인됩니다.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에서 HS 코드 8170에 대해 품목별, 국가별 검색한 화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과 같은 수준의 정보라 할 수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수출입 실적을 '<u>갑 제7호증 HS8710 2023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u>'으로 제출합니다. 위 호증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갑 제7호증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HS 8710 수출입 실적]

수출입 실적(품목별+국가별)

검색조건 통계항목 : 품목별+국가별, 품목명 : 8710전자와 그 밖의 장갑자랑[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름의 부분풍, 국가명 : 전체, 하위품목 유무 : 무, 조회기간 : 2023 ~ 2023, 통계기준 : 수리일, 중량단위 : 본

		100	200					단위:톤(TON), 천 달리
기간	국가	HS코드	품목명	수출 중량	수출 금액	수입 중량	수입 금액	무역수지
<u></u>	6		(1	2,148.7	116,536	906.3	113,609	2,927
023	그리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44.0	390	0.0	0	390
023	네덜란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4.3	277	-277
023	노르웨이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3	294	0.0	2	293
2023	대만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0.0	0	0
023	덴마크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9.5	234	0.0	0	234
023	독일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326.9	3,323	382.4	64,619	-61,295
023	라트비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26.0	6,725	0.0	0	6,725
023	루마니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0	483	0.0	0	483
023	말레이시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1	26	0.0	0	26
023	멕시코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0.0	1	-1
1023	미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85.6	2,314	120.9	22,156	-19,843
023	바레인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41.7	1,340	0.0	0	1,340
023	사우디아라비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209.4	14,597	125.2	8,832	5,765
023	스페인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18.6	1,301	0.0	0	1,301
023	성가포르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32.5	7,014	2.2	140	6,873
023	아일랜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70.6	832	-832
023	에스토니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62.7	6,274	0.0	0	6,274
023	영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6.8	304	24.2	2,817	-2,513
023	이라크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70.8	8,826	0.0	0	8,826
1023	이스라열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31.7	832	20.6	1,806	-974
023	이탈리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차	88.4	3,642	10.5	268	3,374
023	인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1	20	0.0	0	20
023	인도네시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255.0	19,463	0.0	0	19,463
023	중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0.0	1	-1
023	체코공화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53.0	437	0.0	0	437
1023	캐나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3.5	220	17.1	2,922	-2,703
023	태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1.7	167	0.0	0	167
023	뒤르키에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39.0	3,047	2.2	180	2,867
023	파키스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43.3	443	0.0	0	443
023	몰란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14.4	32,156	119.5	8,344	23,812
023	프랑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0.0	0	6.6	411	-411
023	핀란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1.2	26	0.0	0	26
2023	호주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	61.4	2,640	0.0	0	2,640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두고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무역협회 역시 대한민국 무기류 수출입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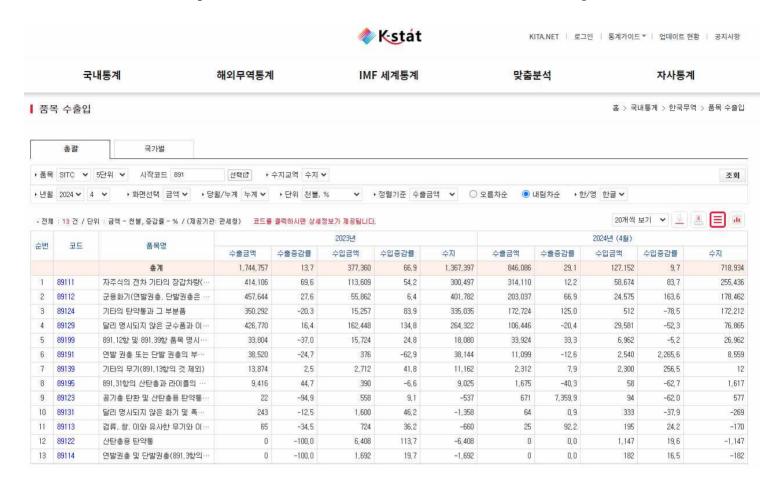
대한민국의 수출입 통계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인 <u>'한</u> 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정보인 'HS 코드 93'('무기‧총포탄) 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개하고 있는 'HS 코드 8710'(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의 정보가 더해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 실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SITC 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SITC분류체계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이며, 앞서 언급한 HS 코드와 함께 상품분류제도의 대표적 코드 중 하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중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2)페이지를 통해 'SITC 코드 891'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군용화기', '연발 권총', '전차', '탄환' 등 13개 항목에 걸쳐 대한민국의 수출입 실적이 확인됩니다(갑제8호증 SITC891 2023년 수출입 실적). 즉,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더해 'HS코드 8710'인 '전차' 등의 수출입 실적까지 포함된 정보가 이미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공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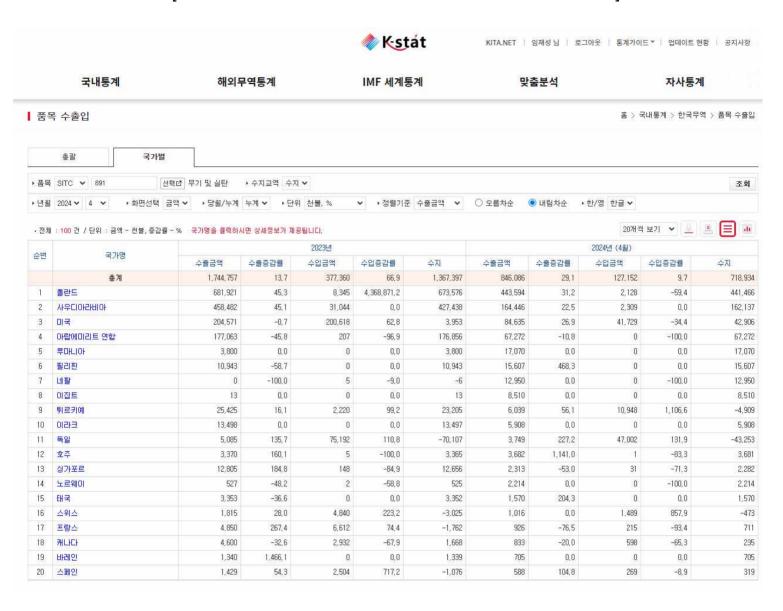
2) https://stat.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SITC 코드 891에 대해 검색한 화면]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이 사건 정보의 핵심 분류인 '국가별 실적' 역시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갑 제9호증 SITC891 2023년 국가별 수출입실적). 즉, 대한민국의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에 대한 국가별 수출입입 실적 정보는 이미 널리 공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SITC 코드 891에 대해 국가별로 검색한 화면]



반복하건데,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가, 나아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정보들이 널리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어떤 국방 관련 국익의 중대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익을 해칠 현저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한 중요한 배경은, 피고가 2024. 1.경한국무역협회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던 무기 관련 정보-MTI 코드 97(무기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갑 제10호증 2024. 2. 27.자 한겨레 기사). 원고가 추정하건데 피고는 현재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본 소장을 수령한 이후 한국무역협회에게 'SITC 코드 891'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K방산',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등을 언급하며 무기류 수출입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존에 공개되는 정보들을 비공개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무지'나 '사각지대'에 기대 얼마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확인을 받고자 본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4. 유엔 무역통계 역시 대한민국 무기류 수출입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 사건 정보는 또한 유엔 무역통계(UN Trade Statistics)3)에서도 아래와 같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갑 제11호증 유엔 무역 통계 제공 대한민국 무기류 수출입 실적).

³⁾ https://unstats.un.org/unsd/trade/default.asp

[갑 제11호증 유엔 무역 통계 제공 대한민국 무기류 수출입 실적 중 일부]

Showing 1 to 69 of 69 Results								Extended Columns	6 (≔ ⊞			
Period † ↓	Trade Flow † ↓	Reporter † ↓	Partner † ↓	2nd Partner † ↓	Customs Desc † 1	Transport Mode † ↓	Commodity Code † ↓	Trade Value (US\$) † ↓	Net Weight(kg) † ↓	Gross Weight † ↓	Qty Unit † ↓	Qty †
2022	x	Rep. of Korea	World	World	TOTAL CPC	TOTAL MOT	93	\$1,290,437,36	5 0	0	N/A	
2022	x	Rep. of Korea	United Arab Emirates	World	TOTAL	TOTAL MOT	93	\$326,865,110	0	0	N/A	
2022	x	Rep. of Korea	Saudi Arabia	World	TOTAL CPC	TOTAL MOT	93	\$298,734,13	3 0	0	N/A	

이처럼 유엔 무역통계는 이 사건 정보인 HS 코드 93(무기·총포탄 및 그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무역통계를 대상 국가별, 품목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료의 경우 2015~2016년 자료는 2017년 5월, 2017년 자료는 2018년 5월, 2018~2019년 자료는 2020년 4월, 2020~2022년 자료는 2023년 8월 등으로 자료 업로드가 1~3년씩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에, 통상 최신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를 통한 정보를 확인해왔던 것입니다.

즉, 유엔 무역통계에서도 지속적이고 통상적으로 확인되는 정보에, 피고는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당한 근거를 붙여 위법한 비공개처분을 한 것입니다.

5. 소결

행정소송의 원칙상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을 때 국방 영역에서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① 피고조차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무기(전차류) 수출입실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 ② 한국무역협회·유엔 무역통계에서 모두 이사건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본다면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대한민국 국방에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볼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피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무역통계에서 제공되는 대한민국의 무기류 수출입 실적부터 비공개하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은 전혀 없으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인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VII.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영국의 사례

영국은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무기류 수출입 정도를 가장 상세하게 공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원고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는 피고의 처분근거가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분기별로 신청된 무기류 수출 허가에 대해 발급·거부·취소 여부와

대상 국가, 품목, 금액 등의 자료를 '전략 수출통제(Strategic export control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4)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략 수출통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 GOV.UK

Home > Business and industry > Trade and investment > Exporting > Export controls and licensing

Guidance

Strategic export controls: licensing data

Reports and data on export control licensing compiled by the export control organisation.

From: Export Control Joint Un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and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Published 8 July 2021

Last updated 16 January 2024 — See all updates

원고는 영국 전략 수출통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받은 영국의 전략 수출 관련 2023년 2분기 자료를 '갑 제12호증 영국 전략수출통제 2023년 2분기 정보'로 제출합니다. PDF 기준으로 총 94장에 달하는 상세한 2023년 2분기 영국의 수출정보에는, 무기류 수출 관련 정보도 매우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⁴⁾ https://www.gov.uk/guidance/strategic-export-controls-licensing-data#quarterly-reports

분류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 제12호증 영국 전략수출통제 2023년 2분기 정보 중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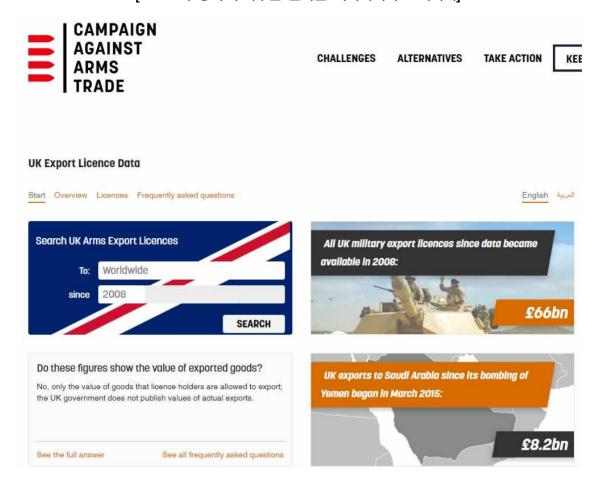
Source: Strategic	export contr	rols: licensing s	tatistics: 1 April to 30	June 2023						
This worksheet c	ontains one	table. Refer to	notes which can be fo	und on the Notes	worksheet. [x] denotes a dat	a point that is	not available,	[z] denotes a c	lata point that is n	ot applicable and 0 means
Filters are active	in row 5 and	d may hide som	e data. To turn off all	filters select the	'Data' ribbon then 'Filters' but	ton or use [Ctr	l, Shift, L].			
Destination	SIEL Sub-type	Licence	Types of goods on		Description of a second	Number of	small firearms	Some or all issued on appeal	Some or all subsequently revoked	Footnotes
Country [note *	[note 4]	Uutcome	licence [note 5]	Temporary	▼ Description of goods	▼ licences ▼	[note 8]	[note 9]	* [note 9]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assault rifles	1	. 182	·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components for assault	1	[x]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components for pistols	1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machine guns	1	7	'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pistols	1	103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영국의 무기류 포함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분석과 토론, 비판과 견제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에 본부를 둔 'Campaign Against Arms Trade'(CAAT, 무기거래 반대 캠페인)5이라는 국제NGO의 경우 영국의 무기류 수출 정보를 재가공해 보여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6)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영국의 무기류 수출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분석하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⁵⁾ https://caat.org.uk/

⁶⁾ https://caat.org.uk/data/exports-uk/

[CAAT의 영국 무기수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원고는 CAAT의 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받은 2008년 이후 영국의 국가 별 무기류 수출허가 정보를 '<u>갑 제13호증 CAAT 영국 무기류 수출허가 정</u>보'로 제출합니다.

Ⅷ. 결론 및 이후 절차에 관한 의견 (인카메라 심리)

현재 대한민국는 무기수출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적 우선순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을 목표로 하는 'K-방산'이 순항중

이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된다"와 같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갑 제14호증 2024. 5. 13.자 헤럴드경제 기사). 아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의 2024. 2. 12.자 "진격의 K-방산…올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향해 잰걸음"라는 무역뉴스인데, 현재 방위산업, 무기수출에 얼마나 많은 자원과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지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격의 K-방산…올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향해 잰걸음" 한국무엽협회, 2024. 2. 12.자 무역뉴스 기사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올해도 굵직한 방산 수주가 잇따르면서 <u>정부가 제시한 '4대 방산 강국' 목표</u>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방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u>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달러(약 18</u> 조6천억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200억달러에는 못 미치고, 전년도 실적인 173억달러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질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 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 확대를 뒷받침하고, 권역별·거점국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따라서 현재는 더욱더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무기류 수출입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검증과 견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무기류 정보의

공개를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비공개이며,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매우 부당한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이미 유사한 수준은 정보가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될 경우 국방이라는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위법하게 비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 사례들에 비춰보았을 때도 부당한 비공개이며, 알권리와 정책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귀 재판부께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원고는 이후 절차에 관한 의견으로서, 재판부께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시어, 인카메라 심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 길 요청드립니다. 위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정보들이 국방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공개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 국익 침해가 공개로 인해 얻어질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큰지 등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쟁없는세상 비영리단체등록증

1. 갑 제2호증 전쟁없는세상 정관

1. 갑 제3호증 여지우 재직증명서

1. 갑 제4호증 피고 2024. 3. 6.자 정보비공개처분

1. 갑 제5호증 피고 2024. 3. 26.자 이의신청기각 처분

1. 갑 제6호증 국방대학교 정책보고서

1. 갑 제7호증 HS 8710 2023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

1. 갑 제8호증 SITC891 2023년 수출입 실적

1. 갑 제9호증 SITC891 2023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

1. 갑 제10호증 2024. 2. 27.자 한겨레 기사

1. 갑 제11호증 유엔 무역 통계 제공 대한민국 무기류 수출입 실적

1. 갑 제12호증 영국 전략수출통제 2023년 2분기 정보

1. 갑 제13호증 CAAT 영국 무기류 수출허가 정보

1. 갑 제14호증 2024. 5. 13.자 헤럴드경제 기사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소장 부본 1부

3. 소송위임장 1부

4.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24. 5.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 재 성

서울행정법원 귀중